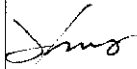


팀원	팀장	단장	공람
			

인천일보

경기판

대표전화 (031)232-2288

2008년 3월 27일 목요일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대상 지역

간척지로 확대 추진 논란

도, 화옹·대송지구 추가계획...식량안보 측면 우려 대두

지난해말 평택, 화성, 당진 일원이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대상 지역으로 확정된 가운데 경기도가 또 다시 시화호와 화성호 일원으로 경제자유구역을 확대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시화호와 화성호 일원은 그동안 간척사업 추진에 따른 환경파괴 논란이 일었던 곳으로 이들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되면 유사시 식량위기 대응능력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26일 도에 따르면 도는 김문수 지사의 지시로 현재 평택, 화성 일원을 대상으로 추진중인 황해경제자유구역을 송산그린시티와 시화호, 화성호로 확대키로 했다.

이를 통해 경기만과 새만금, 평택권을 잇는 환황해관광역경제특구를 조성, 중국에 맞서 동북아의

경제주도권을 확보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도는 이에 따라 산업연구원이나 국토연구원 등 외부전문기관에 '서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위한 타당성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현재 도가 추가지정 타당성을 검토중인 지역은 송산그린시티 54.69만㎢(1천656만평)와 시화호 대송지구 44.3㎢(1천330만평), 화성호 화옹지구 62.63㎢(1천879만평) 등이다. 전체 면적만 황해경제자유구역의 2.5배에 달한다.

그러나 화옹지구와 대송지구는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추진된 간척지여서 다른 용도로의 전환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가 수입에 의존하

는 밀가루와 옥수수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이 폭등세를 보이고 있는 등 식량안보 위기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꾸로 정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화호, 화성호 등 간척사업으로 조성된 농지마저 산업용지나 관광용지로 용도변경돼 사라지게 되면 식량대처능력에 심각한 타격이 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이 주변지역개발과 경제과급효과를 감안하더라도 '덕'보다 '실'이 많은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문수 지사는 이와관련, 올초 신년사를 통해 "시화호와 화성호 일원에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물류사업단지를 조성해 국내 기업들이 땅값 걱정없이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현권기자 (블로그) ink